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與 “검찰개혁 이어지길” vs 野 “답정너 징계위”



정의당 “정당성 시비 한계… 文대통령이 결정할 때”

국민의당 “결과 역시나… 윤석열 찍어내기 드라마”

여야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중징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됐다며 “답정너 징계위”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답정너 징계위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

다”며 “진여 코드 징계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났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어긋나려는 법치주의 시계를 대통령이 돌려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정당성 시

비가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다”며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정직 2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징계위 판단을 존중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며 “검찰 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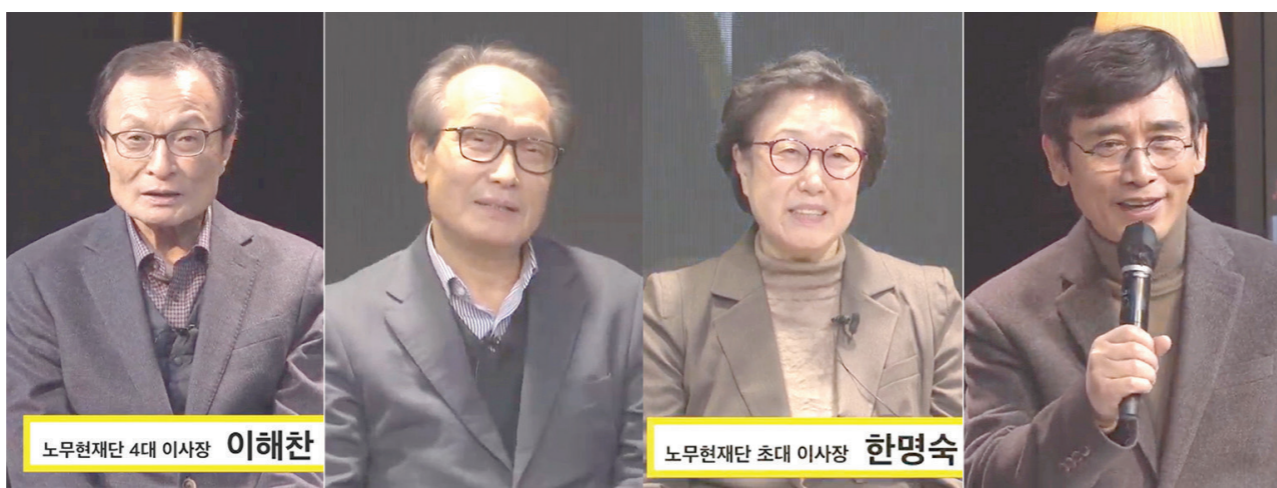
이해찬·한명숙·이병완·유시민 한자리… ‘정권 재창출’ 강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좋다”면서 K-방역을 호평했다.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인 한 전 총리는 이날 저녁 제1회 유튜브채널에서 진행된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 방송’ 역대 이사장들과의 대담에 나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을 가장 가운데, 가장 먼저 두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과, 무슨 거기에 정치적인 야심을 절대 섞지 않는 우직함에 플러스 진실을 담아 문재인식의 방법을 이끄는 데 국민이 함께해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란 바이러스가 참 어렵 때는 ‘괴상하다 이거 무뎠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가 옴으로써 지금의 2020년 전세계를 왕창 재편하는 하나의 진동 같은 걸 느끼게 된다”며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이 세상에 이런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코로나 상황을 보니 전세계적으로 7백만명이 확진받았는데 우리는 4만 5000명, 0.6%다. 150개국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체제”라며 “방역도 잘하기도 하고 건강보험제도도 잘 발전되고 의료진의 헌신성이 있고 국민들 자발적 절제도 있어서 그런 것”이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4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병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3대 이사장), 한명숙 전 총리(초대이사장), 유시민(왼쪽부터) 현(5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2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라고 거듭했다.

이 전 대표는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선 시민들이 탈출한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라며 “우리가 그만큼 유럽을 능가하는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스스로 비하하는 헬조선 담론이 몇 년전까지 있었으나 코로나19 대처 과정(을 보면) 실제 우리가 이뤄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생각보다 괜찮은 일들이었다”며 “한국 사회의 재발견이랄까. 이런 발견도 하게되는 그런 감정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나선 친노 원로들은 일

을 모아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를 “10년의 단절”로 지칭하며 “(정권을) 상당기간 계승하는 게 좋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이병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는 유 이사장의 지난 총선 ‘180석’ 발언을 언급하며 “두가지지를 주문한다. 하나는 코로나를 이번 연말로 끝내달라. 또 20년 집권을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30년(이라고 하라)”고 농담 섞인 주문을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당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이 되고 정치는 주도권을 잡긴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는 보수세력이 아주 강한 사회”라면서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자발적인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야하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 이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과 노력이 결여됐는가”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숨겨놓은 비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재단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면서 “공격받을 수록 재단이 늘어나고 회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소병철 의원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위법행위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 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병철 의원은 “우리 순천지역에서도 환경미화원 분이 후미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던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